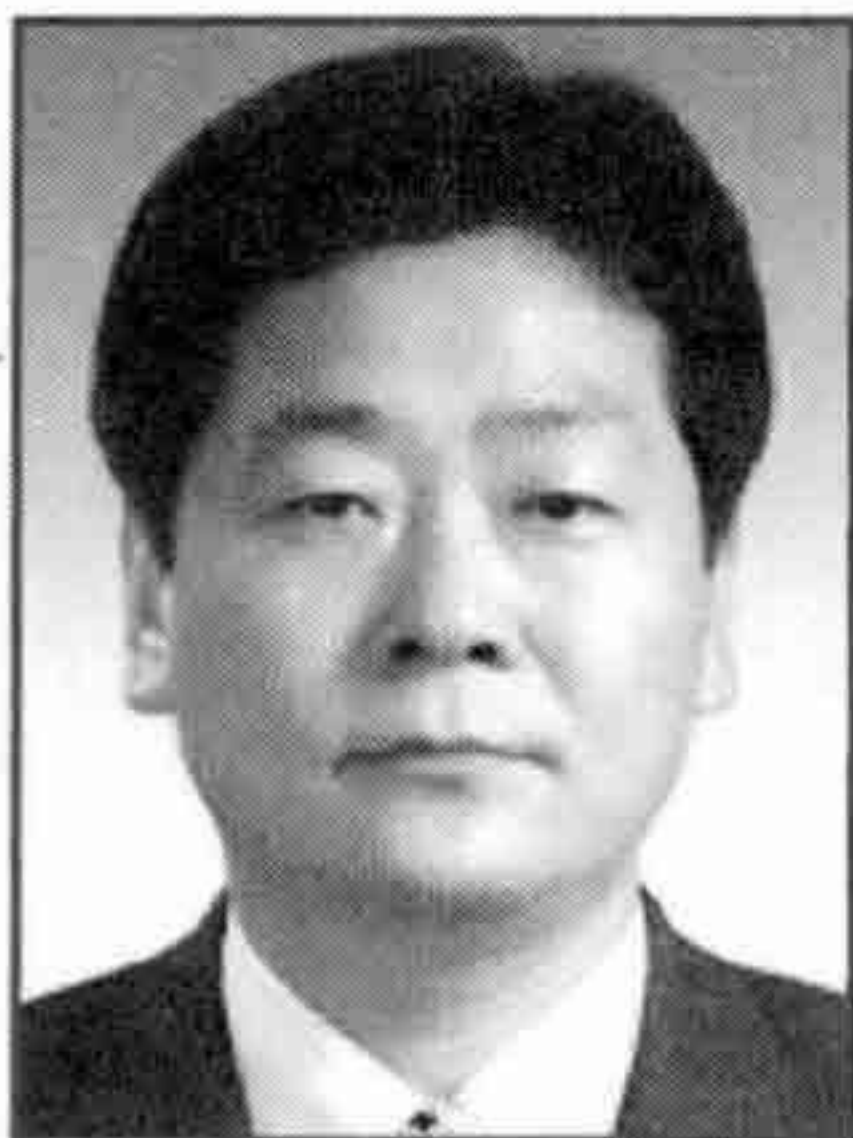


2008년 대기환경정책 추진방향



이 성 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정책과장
☎ 02-2110-6781 seonghl@me.go.kr

필자약력

-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 자원순환정책과장, 대기정책과장

1. 그간의 주요 성과평가

1-1. 오염현황

우리나라 대기 오염은 저황유와 LNG 등 청정연료 공급확대로 아황산가스(SO₂)와 일산화탄소(CO) 등 “개도국형” 대기오염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미세먼지(PM₁₀)와 이산화질소(NO₂)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오존주의보 발령회수도 2002년 이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악취관리지역(시화·반월, 울산, 인천 등 17개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악취 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악취 민원이 증가(2003년 387건→2006년 1,426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반도의 온실가스 농도와 기후변화의 영향은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구 분	세 계 평 균	한 국
CO ₂ 농도(2005)	380ppm	389ppm
평균기온 상승(지난100년)	0.74℃	1.5℃
해수면상승(21C말 59cm)	도쿄, 뉴욕 등 침수	서울시 면적의 1.4배 침수

1-2.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규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주요 오염원에 대한 배출기준을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등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대기환경 관리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주거지역 소음, 공단 악취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M₁₀ 오염도는 런던의 2배, NO₂는 파리의 1.5배로 국민건강에 위대한 수준으로 사업장 총량제 등 효율적인 선진 정책과 지원 제도의 확대와 대기환경관리 여건을 좌우하는 에너지·교통·도시계획정책 등 다른 부처의 정책과의 통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대기환경수요에 대응할 조직 및 정책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2008년에 대기보전국을 '기후대기정책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기후변화정책과'와 '기후변화협력과'를 신설하였다.

2. 2008년 대기환경정책 추진방향

2-1. 이명박 정부의 대기정책방향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기정책방향의 비전은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는 수준의 쾌청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이며,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를 첫째, 주요 대도시의 대기환경을 동경 수준으로 개선하고, 둘째, 지구환경 리더십 강화에 두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2. 2008년 대기환경정책 추진방향

① 앞선 자동차 배출가스 정책으로 미래형 저공해차 시대 개척

하이브리드 자동차, 천연가스 차량 등의 보급을 확대하고 2010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세계 감면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로드쇼 등을 통해 천연가스 버스 등의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해 나가며, 연료전지 자동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에는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전국 수소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료전지 자동차 시대를 개척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중 천연가스 버스 비율을 2007년 69%에서 2008년에는 81%로 제고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차량 보급지원을 확대(2007년 2,103대 → 2008년 2,794대)하고 농기계, 선박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트랙터 등에 대한 배출기준을 신설하여 연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시·도 조례를 통하여 "환경지역(EZ)"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수도권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공동으로 환경지역 시범 운영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친환경자전거 도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②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장 관리대책 추진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통해 감축 노력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통해 효율적인 대기오염배출 저감노력을 지원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배출량이 미미한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감축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단별(2006~2007), 조선업(2007)에 이어 철강(2009), 소각시설(2010)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2008~2012년 중 전국 악취배출 사업장(950개소)에 대한 맞춤형 악취저감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③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대기중 유해대기물질(HAPs)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의 80%를 배출하는 업종(화학, 펄프, 석유정제 등 5대 업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MACT)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대기 중 수은 오염도 현황 조사 및 주요 배출원을 분석하는 등 수은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PM2.5 오염도 현황 및 배출원별 기여도를 분석(2008. 12)하고, 저감대책 및 비용·편익 분석 등 대기환경기준 설정방안을 연구(2008~2009)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 오존오염을 개선하고자 유증기회수장치(STAGE II)를 2008년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신규 및 대형 주유소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수도권 관리권역에 보급되는 친환경도료(VOC 함유기준 강화)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친환경도료 보급 활성화 방안을 금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④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저감

황사 문제를 「동북아 지역 아젠다」로 승격하여 황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내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지역협력 최고 수준에서 황사대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황사피해방지 5개년 종합대책(2008~2012)」을 수립할 계획이다.

황사시 유해물질 실시간 분석·공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백령도와 수도권 등에 황사 실시간 유해물질 측정소를 금년 3월부터 가동하고, 황사발원지 모니터링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중·일 3국 실무국장급회의」, 「황사 공동연구단」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질소(N)에 대한 동북아 국가간 오염물질 이동량 산정연구 등 한·중·일 장거리이동오염물질(LTP)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⑤ 기후변화 대응 국제 리더십 강화

저공해자동차 보급, 매립가스 자원화 등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크고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크며 신성장동력

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집중 발굴하고,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전환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후-대기 통합환경전략(IES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IPCC지침에 따른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배출계수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 배출계수 관리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환경부문(폐기물·하수처리장 등), 수송부문에 대한 배출통계·계수를 개발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영향평가 및 적응 마스터플랜을 금년 10월까지 수립하고 기후·대기·식생·해양 등 통합적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2008~2010), 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해양·기후 전문가 T/F 운영하는 한편, 제주도 등 기후변화 영향 심각지역에 대한 종합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기후변화 적응 인벤토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관련 인식조사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2008년 중)하고 지자체, 시민단체, 기업과 감축, 적응 등에 대한 공동 캠페인 추진 등 국민과 기업의 가치관을 전환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 전략을 수립·시행할 것이다.

기후변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국제협상 등 특성화대학원을 확대지정(3개→6개)하고 이들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자체와 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3. 마무리

환경과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활기찬 시장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비용효과적인 오염감축과 시장선도형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에 기초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여 섬기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며, 과학적 기반에 입각한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